

2016년 해양수산부 공직복무관리계획

2016. 2.

2016년 해양수산부 공직복무관리계획 수립(요약)

I. [수립근거] 「공직복무관리업무규정(총리 훈령)」 제3조

- 총리는 공직복무업무지침 마련, 중앙행정기관장은 세부지침 마련 후 공공기관 등 산하기관 시달

* 국조실에서 '2016년도 공직복무관리 업무지침'을 통하여 4대 중점 추진사항 (① 공직기강 확립 노력 배가, ②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위반행위 차단, ③ 국정 과제의 성공적 완수 지원, ④ 엄격한 신상필벌 원칙 확립) 시달(2016. 1. 13.)

II. [추진계획] 우리부는 4대 중점 추진사항 이행을 위한 자체 공직복무 관리계획 수립하여 자체 목표, 4대 중점 추진사항 및 10개 세부 과제 선정 및 추진

* 국조실에서 각 부처의 공직복무관리계획 이행 충실성 및 실적에 대해 연말에 평가 실시

[목표] 부정부패 사전 예방 및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

① (공직기강) 공직기강 확립 노력 배가

① 사전 예방적 복무점검 강화(연중) ② 구조적 비리에 대한 기획점검 활성화(연중) ③ 유관기관 협력 강화 및 자체 감찰역량 제고(연중)

② (정치적중립)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위반행위 차단

④ 주요 계기시 예방교육 실시(2월) ⑤ 정치적 중립 위반행위 집중 감찰(연중) ⑥ 선거철 공직기강 해이 방지(2월~4월)

③ (국정과제) 국정과제의 성공적 완수 지원

⑦ 선제적 정책현안 점검(연중, 장·차관주재 2회) ⑧ 적극행정 분위기 조성(연중)

④ (신상필벌) 엄격한 신상필벌 원칙 확립

⑨ 공직비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적용(연중) ⑩ 우수공무원 발굴·포상 및 고충처리 지원 강화(연중)

III. [조치계획] 소속·산하기관 지침시달, 자체 복무관리계획(산하기관) 수립·시행토록 조치

I

2016년 공직복무관리 여건

□ (정책기조) 금년도는 현 정부 출범 4년차로 부패척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 표명

- ◇ 정부는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결코 용서치 않아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(대통령 국무회의 발언, '16.1.19.)
- ◇ 부정부패의 근절은 우리 경제를 활성화하고 사회적인 신뢰를 회복하는 근간(국무총리 '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' 모두 발언, '16.1.12.)

- 부정부패 발생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이를 '경제살리기' 효과로 유도
 - '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그램'을 통해 대형 국책사업 및 공공기관의 예산누수와 비리에 대한 척결의지 천명
- (공직환경) 국회의원선거('16.4.13.)와 관련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나 선거 전후로 공직기강 해이사례가 발생할 우려
- '김영란법' 시행('16.9.28.)에 따라 비위공직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예상됨에 따라 지속적인 교육과 사전예방이 필요

II

공직복무관리 추진방향

- (공직기강 확립 노력 배가) 사전 예방적 복무점검 강화, 구조적 비리에 대한 기획점검, 유관기관 협력 강화를 통하여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
- (정치적 중립 위반 차단) 주기적 예방교육, 선거 관련 복무 점검·관리를 강화하여 공직자의 엄정한 정치적 중립 유지 및 선거철 공직기강 해이 방지
- (국정과제 완수 지원) 국정과제와 규제개혁과제 등 정책현안에 대해 장·차관 주제로 선제적 점검을 강화하고, 적극행정면책 등 적극적 업무처리를 유도해 국정과제 성과 창출 지원
- (신상필벌 원칙 확립) 비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되, 우수공무원을 적극 발굴·포상하는 등 사기진작 병행

부정부패 사전 예방 및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



- ◆ 공직기강 확립 노력 배가
- ◆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위반행위 차단
- ◆ 국정과제의 성공적 완수 지원
- ◆ 엄격한 신상필벌 원칙 확립



공직기강 확립 노력 배가

- ① 사전 예방적 복무점검 강화
- ② 구조적 비리에 대한 기획점검 활성화
- ③ 유관기관 협력 강화 및 자체 감찰역량 제고

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위반행위 차단

- ① 주요 계기시 예방교육 실시
- ② 정치적 중립 위반행위 집중 감찰
- ③ 선거철 공직기강 해이 방지

국정과제의 성공적 완수 지원

- ① 선제적 정책현안 점검
- ② 적극행정 분위기 조성

엄격한 신상필벌 원칙 확립

- ① 공직비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적용
- ② 우수공무원 발굴·포상 및 고충처리 지원 강화